

Murray에 의하면 욕구의 방향과 강도가 동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V.Vroom의 기대이론(VIE이론)은 ① 자신의 노력이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다는 기대(E : 기대감), ②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주관적 확률 판단 (I : 수단성), ③ 보상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V : 유인가)에 의하여 동기가 결정된다고 본다.(선행정학개론 p.610)

【문 7】 위원회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① 조정이 용이
 - ② 결정의 신중성
 - ③ 책임의식의 강화
 - ④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 (답) ③ 위원회제는 복수의 구성원에 의한 결정을 추구하므로 책임이 분산된다. ④의 경우 위원들의 부분적 교체로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선행정학개론 p.696)

【문 8】 다음 중 행정권의 오용(誤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입법외도의 편향된 해석을 통한 행정행위
 - ②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무사안일
 - ③ 정보의 선별적 배포를 통한 실책의 은폐
 - ④ 법률 중심의 융통성 없는 인사
- (답) ④ 행정권의 오용(誤用)이란 행정권력의 잘못된 행사나 남용을 말하는 것으로 ④의 법률 중심의 융통성 없는 인사는 소극적인 인사일 뿐 잘못된 행정권의 행사는 아니다. 행정권의 구체적인 오용의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공금횡령 등의 부정행위 2) 적극적인 금전수수는 아니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비윤리적 행위 3) 법규의 무시 4)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행되는 입법외도의 편향된 해석이나 부당행위 5) 불공정한 인사 6) 무능력과 무소신 7) 정보의 선별적 배포나 비공개 등을 통한 실책의 은폐 8) 잘못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하는 무사안일과 직무유기 등 (4차원행정학 p.903).

【문 9】 공기업 중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다.
 - ② 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다.
 - ③ 직원은 공무원이다.
 - ④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 (답) ③ 기관의 성격도 정부기관이며 직원도 공무원인 분이다. ①②④는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701)

【문10】 조례제정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조례는 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 ② 주민의 권리,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③ 벌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④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도 모두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답) ④ 기관위임사무는 지방과는 무관한 국가적 사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간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으며 규칙으로만 정해야 한다.(선행정학개론 p.932)

【문1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있어 단층제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 ② 행정의 낭비를 제거하고 능률을 증진시킨다.
 - ③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간과할 수 있다.
 - ④ 국가의 감독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 (답) ② ② 행정의 낭비를 제거하고 능률을 증진시키는 것은 단층제의 장점이다. ①③은 중층제의 단점이며, ④는 중층제의 장점이다.(선행정학개론 p.936)

<정리> 계층구조별 장단점

구분	단 층 제	중 층 제
장점	- 계층의 수가 적어 신속한 행정 - 낭비제거 및 능률증진 - 행정책임 명확 - 자치권 및 지역적 특수성 존중	- 기초와 중간자치단체 간 적절한 업무 분업 - 중간자치단체가 기초단체 기능을 보완 가능 - 국가의 감독기능 유지 가능(중간 단체에 감독기능 부여) - 민주주의 원리 확산(국가의 직접적 개입 차단)
단점	- 국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채택 곤란 - 중앙집권화 우려 : 국가의 직접 개입 - 광역사무처리에는 부적합	- 행정기능의 중첩, 이중행정 우려(문문복례) - 기능배분 불명확과 상하 자치단체간 책임 모호 - 행정의 지체와 낭비 및 비능률 - 지역적 특성 무시 우려(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할 경우)

【문1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기관통합형이다.
- ②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결정한다.
- ③ 광역시에 있는 군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배한다는 전제를 가지며, (나)의 경우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가 이슈의 제기를 억압한다는 것으로 신엘리트이론이라고도 한다. (다)의 R.Dahl의 다원론은 Bentley와 Truman 등의 고전적 다원론(이익집단론)과는 달리 엘리트가 대중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라)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지문이다. 엄밀히 보면 이는 고전적 엘리트 이론이라기보다는 Bachrach와 Baratz가 주장한 신엘리트이론(무의사결정론, non-decision making)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Mosca, Michels 등이 주장한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Bachrach와 Baratz 등이 주장한 신엘리트이론은 소수지배엘리트가 일반대중을 지배하며, 자신들의 선호와 이익을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시킨다는 비민주적, 하향적 통치질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거나 안전한 의제만 논의되도록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제는 아예 거론조차 못되도록 봉쇄하는 이른바 ‘무의사결정’을 강조한다는 점은 신엘리트이론의 특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라)는 엄밀하게는 고전적 엘리트이론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신엘리트이론의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고전적 엘리트이론도 결국은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일반대중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엘리트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해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본다면 출제의도에 따라서는 (라)도 맞는 지문으로 처리될 소지가 높다 (정정길, p.224, 최봉기).

【문19】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정책전문가들이 공식적·비공식적 접촉과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결정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창출한다.
 - ② 전문가 외에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다양한 요구들이 정책에 반영된다.
 - ③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내용의 합리성이 제고된다.
 - ④ 정책공동체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인재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고 검증된 인재의 발탁이 용이해진다.
- (답) ② 정책공동체는 전문가집단으로서 비교적 인식을 같이하는 동질적인 전문가와 관료로 구성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선행정학개론 p.385)

【문20】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통제를 위해서는 결과(산출)의 측정이 용이해야 한다.
- ② 읍부즈만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기관은 국민고

충처리위원회라 한다.

- ③ 국회는 입법권 이외에도 재정권과 조사권을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한다.
 - ④ 사법적 통제는 주로 사후통제이다.
- (답) ①(잠정) 행정책임이란 성과(결과)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므로 행정통제를 위해서 반드시 결과(산출)의 측정이 용이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행정통제의 기준은 효과성이나 능률성 뿐 아니라 절차적 민주성이나 민주성, 형평성, 대응성, 공익성 등도 요구된다.(선행정학개론 p.1383)